

대전

대전 · 충청에서 대선 판가름 난다

박정식 |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19대 총선 결과 요약

1) 4.11총선 승패는 대전 · 충청의 중부권 유권자의 선택이 좌우

2012년 4.11총선 결과는 한마디로 민주통합당 수도권 선전에도 불구하고 참패(127석), 새누리당 과반의석 압승(152석),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성공(13석), 자유선진당 몰락(5석)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전, 충청의 중부권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민주통합당 패배와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승리를 가르는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전 · 충청 · 세종 선거구 25석 중 민주통합당은 10석을 확보한 반면, 새누리당은 12석을 차지하면서 충청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고, 충청권 1당으로 올라섰다.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대전, 충남에서 한 석도 못 건지고, 충북에서 겨우 1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19대 총선에서 11석이나 늘려 새누리당의 중부권 공략이 성공한 셈이다.

[표 1] 대전·충청·세종지역 19대 총선 결과

| |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자유선진당 |
|----------------------|------------------------------|--|-----------------------------|
| 대전(6석) | 3석 (유성구, 서구갑, 서구을) | 3석 (동구, 중구, 대덕구) | - |
| 충남·세종 (11석) | 4석 (천안갑, 천안을, 공주, 세종시) | 4석 (보령서천, 부여청양, 홍성예산, 당진) | 3석 (아산,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
| 충북(8석) | 3석 (청주흥덕갑, 흥덕을, 청원) | 5석 (청주상당, 충주,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 증평진천괴산음성) | - |
| 총계(25석) (18대 24석) | 10석 (18대 8석) | 12석 (18대 1석) | 3석 (18대 14석+무소속 1석) |

2) 민주통합당 대전에서 의석수와 득표율 대약진

대전·충남만 보면 민주당통합당은 총 17석(대전 6석, 충남 10석, 세종 1석) 가운데 7석(대전 3석, 충남 3석, 세종 1석)을 확보해, 지난 18대 총선의 2석(대전1, 충남1)에 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전에서 18대에 1석을 얻은 민주통합당은 3석으로 늘린 반면, 5석을 차지했던 자유선진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해 몰락했다. 새누리당도 이번에 3석을 차지했다. 대권후보인 박근혜 바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위원장은 대전, 충남을 각각 2차례 유세 방문해 수도권, 강원 다음으로 공을 들였다. 그러나 과거 17대 탄핵바람, 18대 지역바람과는 달리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주는 '표 쏠림'은 없었다. 향후 대선에서 대전·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3) 대전지역 진보진영(야권연대)의 의미 있는 정당득표율 획득

야권연대는 대전에서 정당득표율 42.74%(민주통합당 33.7%, 통합진보당

9.04%)를 획득하여 이 지역의 보수세력(새누리당, 선진당)의 52.21%에는 못 미치지만 근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18대 선거와 비교하면, 진보진영의 24.49%(민중당, 민노당, 진보신당)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다.

[표 2] 대전지역 19대 총선 결과

| 선거구명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기타 |
|------------------|----------------------------------|---------------------------------|---------------------------------|------------------------------|---|
| 동 구 | 이장우 36,780(34.97%) | 강래구 35,069(33.34%) | 임영호 30,821(29.30%) | | 송유영(무소속) 2,492(2.36%) |
| 중 구 | 강창희 48,934(42.73%) | 이서령 30,597(26.72%) | 권선택 33,400(29.16%) | | 남일(정통민주당) 1,572(1.37%) |
| 서구갑 | 이영규 33,423(33.96%) | 박병석 53,671(54.53%) | 송종환 8,964(9.10%) | | 이강철(무소속) 2,359(2.39%) |
| 서구을 | 최연혜 25,013(23.26%) | 박범계 46,908(43.62%) | 이재선 32,982(30.67%) | | 서진희(정통민주당) 913(0.84%) 김윤기(진보신당) 1,708(1.58%) |
| 유성구 | 진동규 38,533(30.72%) | 이상민 65,900(52.54%) | 송석찬 19,962(15.91%) | | 이재형(기독당) 1,015(0.80%) |
| 대덕구 | 박성호 40,425(50.19%) | | 이현 15,146(18.80) | 김창근 24,957(30.99%) | |
| 비례득표율 (정당득표율) | 213,432 (34.31%) (18대-24.78%) | 209,588(33.70%) (18대-18.61%) | 111,354(17.90%) (18대-34.34%) | 56,269(9.04%) (18대-5.88%) | |

*18대 진보당계열 정당득표율 5.88%(민노당 3.87%, 진보신당 2.01%)

정당비례득표율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33.70%를 얻어 18대(18.61%)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약진하였고, 통합진보당이 9.04%를 획득하여 18대 5.88%(노동당 /19,109/ 3.87%, 진보신당 9,944/2.01%)보다 다소 늘었다. 반면에 자유선진당의 정당득표율은 18대 34.34%에서 19대 17.90%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해도 진보진영 득표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대전시장 선거 득표 결과는 보수진영이 75.17%(한나라당 28.50+자

유선진당 46.67), 진보진영은 24.81%(민주당 23.28+진보신당 1.53)에 불과했다. 대전시 광역 비례대표의원 득표 결과는 보수진영이 61.79%(한나라당 24.80+자유선진당 36.99), 진보진영은 37.66%(민주당 29.83+민노당 2.53+진보신당 1.48+국참당 3.82+진보신당 0.17)로 다소 낮았다.

2. 총선 전 판세분석 및 총선 결과-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대전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2004년 탄핵정국보다 여론이 훨씬 좋아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여당의 실정과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완화되고 인물난이 과거보다는 다소 덜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동아일보 자체 여론조사(2012.1.24)에서는 대전·충청지역 정당지지도는 민주통합당(24.9%), 한나라당(18.2%), 통합진보당(6.4%), 자유선진당(6.2%) 순이었다.

그러나 원칙, 쇄신, 감동이 없는 공천으로 당 안팎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을 누르면서 공천을 마무리했을 때, 지지율면에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더욱이 김용민 후보의 막말 동영상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고, 오히려 박근혜 바람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총선 전 대전의 6개 선거구중 유성구, 서갑지역은 당선확실 지역, 서울지역 박빙우세, 대덕구, 중구, 동구는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최소 2개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결과 서부벨트의 유성구(이상민), 서구갑(박병석), 서구을(박범계) 3개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동부벨트의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패했다. 2월 중순까지의 호의적인 분위기가 계속되었더라면 동구에서의 승리를 포함하여 최소 4석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대전지역 총선 성과는 18대 결과와 당초 기대에 비하여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초반의

호의적인 여론을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절반밖에 획득하지 못한 측면에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원인

1) 대전은 상대적으로 지역색 구도가 완화됨

이번 총선은 수도권과 지방과의 선거결과가 판이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사라지는 것에 비해 지방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수도권에서 야권이 압승한 반면, 영남과 강원을 새누리당이, 호남을 민주통합당이 석권하면서 기존 지역주의 구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대전유권자들은 자유선진당 중심의 지역구도를 깨면서도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서부벨트(서구, 유성구)는 민주통합당이, 동부벨트(중구, 동구, 대덕구)는 새누리당이 각각 3개 선거구를 반분했다. 대전·충남까지 확대해서 보더라도 양당이 7석으로 동일하다.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대전·충남의 민심은 반한나라당(새누리당), 비민주, 실망 선진당으로 대표되는 지역정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선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투표하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 공천 및 선거운동과정에서의 지도력 부재

2월 초순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당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공천을 마쳤을 때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지도력 부재, 전략부재 미비로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참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동 없는 공천, 야권연대 과정에서 여론조작, 김용민 막말 파문 등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도 한몫했

다. 특히 야권연대 정책협약은 의식 불리기에만 매달린 탓인지 유명무실했다.

3) 후보자 난립과 경선과정의 갈등관리 미흡

충선 패배지역은 예비후자 경선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로 흐르면서 상호 비방 등 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단합하여 총선을 치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분열양상을 띠고 있었다.

동구는 대전 6개 선거구중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대전에서 현역의원(선진당 임영호) 교체지수가 상당히 높았고(60.4%), 지역위원장의 지역관리 및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는 비토세력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우세했다. 우리당 예비후보들의 상당수가 평소에는 지역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상습출마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곱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선거운동기간 중에 별다른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중구는 경선에서 이서령 예비후보가 50%의 득표율로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일부는 후보자 비방을 일삼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남일 후보는 탈당하고 정통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적극적 대처가 필요했지만 방치한 것도 문제다. 유성구는 이상민 후보의 단수 공천에 반발하여 송석찬 후보가 선진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조직분열 양상을 띠었지만 이상민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일단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대덕구는 대전에서 민주당의 당력이 가장 취약해진 지역이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갈등으로 시작된 대립구도 속에서 당원들이 갈라졌고 조직이 와해됐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총선에서 야권연대 김창근 후보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4) 야권연대의 한계 : 이명박 정권 심판도 정책연대도 살리지 못함

민주당 등 야권연대는 4대강 사업, 각종 감세정책,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MB정권 심판을 주요 이슈로 내 걸었다. 또한 대전충남의 지역이슈로 무분별한 수도권규제 전면 완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후퇴, 각종 감세정책으로 공무원 월급을 못줄만큼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 등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MB정권 심판이라는 확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슈와 정책선점에 있어서 확실한 심판여론도 형성 못하였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MB정권 심판의 호기였지만 민주당 등 야권연대가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심판의 대상인 MB가 사라지고 박근혜가 전면부상하였다. 오히려 야권연대는 한미 FTA 및 제주 해군기지 논란으로 색깔론에 휘말리고 대중적인 지지는커녕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남, 대전·충청, 강원도 등은 여론이 역전되었다.

5)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공약 쟁점화 실패

대전은 상대적으로 원도심(중구, 동구, 대덕구)의 신도심(서구, 유성구)에 대한 소외감과 박탈감이 큰 지역정서를 지니고 있다. 주로 신도심에 예산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하다. 신도심 대구도심, 연구단지 대 비연구단지 간에 이질성이 강하고, 지역성이 희박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평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벨트(중구, 동구, 대덕구)지역의 정책연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대덕구 야권연대 후보자와 민주당후보자 간 공통적인 이슈와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합을 통한 공동대응 측면에서는 각개 격파

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후보들은 대권주자 박근혜를 앞세우고 철저하게 지역공약 위주로 선거전을 펼쳤다. 게다가 진보당에 대한 색깔공세로 야권연대를 이완시키고 김용민 막말을 전면에 부상시켜 야권 전체의 도덕성을 훼손했다.

4. 향후 과제와 전망 : 대전·충청에서 대선 판가름 난다

대전지역에서는 향후 경선과 공천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벨트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여 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신도심 예산집중 문제,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 등을 부각시켜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대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했으나 잘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유명무실했던 야권연대 정책연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우선 이번 총선의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치유하고 조직복원이 필요하다. 함께 경선을 치른 후보가 탈당하여 타 당으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우리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유무형의 선거방해 행위가 있었다. 갈등과 증오의 정치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벨트(동구, 중구, 대덕구)의 발전전략이 제시 되어야 한다. 동구는 유성구, 서구의 신도심에 비해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이 매우 열악하여 인구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5곳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호지부지한 상황이고 임영호 현 국회의원의 무능과 염홍철 현 대전시장의 신도시(서구, 유성구) 중심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중구는 30년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도청사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이 당면 과제다. 동구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유성구, 서남북권) 중심의 정책과 예산집중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높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충남도청의 흥성으로 이전 이후 활용방안 제시 및 공백에 따른 추가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도청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 복합문화센터 개발, 쇼핑센터유치 등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도심의 형태(문화, 주거, 청사 등)를 보존하면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덕구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군사보호, 문화재보호, 상수원보호 구역 등 그린벨트 지역이 64%에 달한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 1호선 노선이 닿지 않고, 시내버스 노선 수도 부족하며,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 배제로 불만이 팽배하다. 대덕구의 교통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에 맞는 계층중심의 복지정책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구 재정을 투입하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풀뿌리단체와 연계한 지역공동체 살리기(어린이도서관 등), 대청댐 주변 공원 활성화 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를 깨면서도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지 않은 대전·충청의 역할에 주목하고, 선거과정에서 유명 무실했던 정책연합의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대선과정에서 야권연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지지율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